

# 韓國 近世史研究의 動向

李 載 勳\*

## 目 次

- |               |                 |
|---------------|-----------------|
| I. 머리말        | 2) 身分制          |
| II. 日帝시기의 研究  | 3. 經濟史分野의 研究    |
| III. 解放이후의 研究 | 1) 土地所有關係와 農業經營 |
| 1. 政治史分野의 研究  | 2) 農業生産力        |
| 1) 兩班과 士林     | 3) 農民의 負擔       |
| 2) 黨爭과 朋黨政治   | 4) 商工業          |
| 2. 社會史分野의 研究  | IV. 맺는말         |
| 1) 鄉村社會       |                 |

## I. 머 리 말

한말, 한국 역사학은 안으로 실학자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고 밖으로 서양근대사학을 수용한 일본의 한국사연구에 자극 받아 啓蒙사학이 등장하였다. 이 계몽사학은 대중의 계몽을 위한 사학으로서 독자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이후, 이 계몽사학은 民族主義史學으로 그 방향을 바꾸었는데, 민족주의 사학은 조국의 광복을 위해 민족정신의 양양을 강조한 바, 역사인식을 통하여 애국심을 고조시키는 데 그 목적이 두어졌고, 당시 일제 관학자의 식민주의 사학에 대항한 것이다. 민족주의사학은 민족적 자각을 뒷받침하였다는 데 긍정적 평가를 받으나, 국수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세계사적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평가도 아울러 받고 있다.

한편, 1930년대부터 역사학을 전공한 신진학자들의 학문활동이 시작되었는데, 社會經濟史學과 實證史學의 두 학풍이 대두하였다. 사회경제사학은 한국사에 세계사적 사회발전단계를 도입하여 일제 관학자의 停滯性論을 배격하였고 사회경제사 연구의 첫 출발이 되었으나, 너무도 도식적이고 연역적 방

\* 人文大學 史學科 教授

법에 의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증사학은 震檀學會를 중심으로 한 학문활동으로 문헌고증과 근대사학의 방법으로 한국사학을 역사과학으로 이끄는 데 공헌하였으나 한국사의 체계적 인식에 한계가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해방을 전후하여 新民族主義史學이 대두하였는데, 그것은 민족주의사학, 사회경제사학, 실증사학 등 세 학풍을 종합한 학풍이었다. 즉 민족주의사학의 역사인식을 토대로 사회경제사학과 실증사학의 학문적 성과를 광범하게 흡수하면서 일제 식민주의사학에 대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학문적 체계를 세워 갔고, 그 역사인식은 지금 한국사학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할 것이다. 이 글은 한국사연구의 발전과정을 조선시대를 대상으로 회고해 보려는 것이 목적이나 취급한 범위가 정치·사회·경제사분야의 몇 가지 문제에 한정되어 전반적인 것이 되지 못한 것을 미리 밝혀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국근세사라 함은 한국사 시대구분에 있어서 편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조선시대에 해당되며, 조선시대 중에서도 개항 이전만을 그 대상으로 한 것임을 밝혀둔다.

## II. 日帝시기의 研究

일제하 한국근세사 연구는 크게 일본인 학자와 한국인 학자의 업적으로 구분된다. 일제 관학자의 식민주의사학은 한국사에 있어서의 他律性과 停滯性을 부각시켜 일제의 한국 통치를 합리화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일본인 학자의 한국근세사 연구도 식민주의 사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그들이 한국근세사에서 다룬 문제는 주로 당쟁사, 대외관계사, 토지제도사, 그리고 조선 후기 사회의 정체성에 관한 것 등이었다.

그들의 당쟁사 연구는 한국인이 자치능력 없는 민족임을 강조하여 일제식민지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한 당쟁亡國論이었고(河合弘民, 瀬野馬熊 등), 그들의 대외관계사와 왜란·호란 등의 연구는 조선의 명에 대한 事大, 日本과의 交隣, 조선이 끊임없이 외침을 받는 나라의 역사임을 강조하는 등 목적의식이 담겨 있었다(中村榮孝, 池内宏, 秋山謙藏 등). 그들의 토지제도사 연구는 토지국유제를 내세워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일제의 토지약탈을 합리화하고자 한 것이었다(和田一郎, 深谷敏鐵 등). 그리고, 그들이 주장한 조선후기의 封建社會缺如論 내지 未成熟論은 停滯性論에 입각한 것이었으며(福田德三), 그들은 實學의 발생도 단순히 외래문화의 전래에 의한 자극으로만 파악하였다(山口正之). 그러나 일본인 학자의 한국근세사 연구 중에는 조선초기의 노비 연구(周藤吉之), 후기 신분제 연구(四方博), 미술사 분야(關野貞) 업적 등과 같이 간과할 수 없는 것들도 있었다.

일제하 한국인 학자의 한국사 연구는 그 수가 적었지만, 한국근세사 연구에도 나름대로의 연구 성과가 나왔다. 張志淵의 《儒學淵源》, 李能和의 《李朝佛敎史》, 柳子厚의 《朝鮮貨幣史》, 洪以燮의 《朝鮮科學史》 등이 저서로 나왔고, 李相伯의 田制개혁운동, 申奭鎬의 土禍, 柳洪烈의 鄉約·書院, 金錫亨의 國

役編成, 朴時亨의 田稅제도, 孫晉泰의 甘藷전과, 李丙燾의 徐花譚 등의 儒學, 李仁榮의 廢四郡 문제 등에 대한 연구성과가 발표되고 있다. 그리고 1936년 丁茶山 百周忌를 전후하여 朝鮮學 운동이 전개되어 鄭寅普, 安在鴻 등이 조선후기의 새로운 학풍을 실학이라 명명하고, 實學을 한국에 있어서의 근대사상의 싹으로 파악하기에 이르렀다.

### III. 解放이후의 研究

한국근세사 연구는 해방 이후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그 연구 성과의 집적이 쌓이기에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였다. 특히 6.25사변을 겪는 과정에서 50년대까지는 연구 성과가 부진하였다.

해방 후 일제하의 연구 성과를 묶은 것들이 책으로 선보였다. 李相伯의 《韓國文化史研究論考》('47)와 《李朝建國의 研究》('49), 全錫淡 외의 《李朝社會經濟史》('46), 李北滿의 《朝鮮社會經濟史研究》('48), 金斗憲의 《朝鮮家族制度研究》('49), 玄相允의 《朝鮮儒學史》('49), 李萬珪의 《朝鮮教育史》('47) 등이 나왔다. 6.25사변 이후에도 연구 활동이 중단되다시피 되었으나 李仁榮의 《韓國滿洲關係史研究》('54)와 조선시대에 국한된 것은 아니나 鄭寅普의 《담원국학산고》('55) 등이 본인들은 남북된 후 출간되었고, 洪以燮의 《丁若鏞의 政治經濟思想研究》('59), 高承濟의 《近世韓國產業史研究》('59) 등이 나왔다.

한편, 50년대부터 국사편찬위원회는 사료 출판에 착수하여 《朝鮮王朝實錄》(양장본 48책, '53-'58), 《備邊司謄錄》(등자 출판 28책, '59-'60), 《承政院日記》(등자 출판 141책, '60-'77) 등의 원전을 차례로 축소 인쇄하여 이 시대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52년 부산에서 《歷史學報》가 창간되어 연구활동의 터전을 닦았으며, 이에 앞서 '47년에 일제하에 폐간된 《震檀學報》가 속간되었으며, 60년대에 진단학회에서 편찬한 《韓國史》 가운데 近世前期篇('61), 近世後期篇('65)은 조선시대의 연구의 길잡이가 되었다. 그리하여 60년대 많은 저서와 논문이 속출되어 연구가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서 '67년 《韓國史研究》가 발간되어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제 60년대 이후의 연구 성과를 한데 묶어 정치·사회·경제사 분야의 몇가지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거니와 거대한 분량을 정밀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개략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 1. 政治史分野의 研究

##### 1) 兩班과 士林

15세기의 정치참여 자격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 兩班論과 良賤制로 견해를 달리하여 활발한 논쟁이 계속된 바 있고, 16세기의 士林에 대한 연구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李成茂는 조선초기 양반의 존재를 본격적으로 다루어 양반과 과거, 관직, 군역제도, 특수군, 토지소유 등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다루어 양반이 누린 각종 특권을 밝혀, 특권계층임을 밝혀 일반 양인은 入仕가 불가능하고 혈통, 가문, 경제력 등 제조건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 피지배계층으로 파악하였다. 그는 당시 신분을 良身分과 賤身分으로 나누며, 良身分은 혈연, 직업, 거주지, 토지소유 등에 의하여 몇개의 계층으로 분화되어 양반·중인·상민으로 구분된다 하였다.((조선초기 양반연구) '80)

이에 韓永愚는 兩班論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조선초기의 사회는 오직 良人和 賤人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양반은 在職者의 대명사이며, 良人중에는 사회계층이 없어 특권지배층이 없고, 그러한 양반의 특권은 16세기 士林勢力 대두 이후에야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였다. 따라서 15세기의 양인은 법제적으로 교육 받고, 벼슬할 수 있는 母 집단으로서의 개방적 신분이며, 이 시기에는 신분이동의 폭이 넓은 것으로 파악하였다.((조선전기 사회경제연구) '83)

두 사람의 논쟁은 오래 계속되었거니와, 이 논쟁에 개재하여 兩班論 혹은 良賤制를 펴는 견해가 발표되었다. 宋俊浩는 조선초기 양반의 존재를 사료를 통해 입증하였고 실제로 양반을 제외한 양인은 피지배계층이라 주장하였다.((조선양반고) '83) 한편, 劉承源은 조선초기의 기본신분을 良人和 賤人으로 보고 良人의 신분적 齊一性을 주장하였다.((朝鮮初期 身分制研究) '87) 전자는 兩班論의 편에 선 것이며, 후자는 良賤制의 편에 선 것이다. 이에 앞서, 李泰鎭은 15세기 후반에 이미 兩班鉅族이 배타적으로 정권을 장악하여 권력집단을 만들어 간 것으로 파악하였고(〈15세기 후반의 거주과 명족의식〉 '76), 이어 土族은 중소지주의 기반으로 江南農法을 도입하여 鄉村을 장악한 세력임을 주장하였다(〈조선전기의 향촌질서〉 '76). 李範稷은 校生이 양인이면 누구나 그 자격이 있으나, 그 정원이 4%로 제한된 문호였다고 지적하였고(〈조선전기의 교생신분〉 '76), 崔承熙는 세조때 혈통적 세습성을 강화시켜 주는 代加制가 확립되었음을 밝혀 양반층의 土族化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라 주장하였다(〈조선시대 양반의 대가제〉 '85). 兩班論과 良賤制의 논쟁은 법제적 신분 개념과 현실적 사회통념으로서의 계층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려니와, 신분과 계층이 함께 배려되어야 할 것이며, 여말 권문세가에서 16세기 士林으로 이어지는 지배층 형성의 과도기적 특징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16세기에 있어서, 종래 土禍를 신·구정치집단의 대립으로 보고 당쟁에 선행된 형태로 파악되어 왔다. 이 시기 정치세력에 대한 李泰鎭의 연구는 在地中小地主 세력이 중앙집권적 관료세력의 향촌지배 강화에 대항하면서 鄉村自治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 표출된 것이라 하였다(〈사람과의 유향소복립 운동〉 '72). 그리고 李秉然은 종래 영남 士林派만을 중요시한 것에서 벗어나 畿湖 士林派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성종代 영남 사람과와 중종代 집권한 기호 사람과의 관계를 연계시키었다. 한편, 와그너(Edward W.Wagner)는 士林이라는 용어는 한 사상운동의 성격으로 기술하는 데는 유용한 용어가 될지 모르나 지배층의 구성적 측면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무의미한 일이라 주장하여 勳舊·士林 二階級論에 반대하였다(〈이조사람문제에 대한 재검토〉 '80). 士林연구는 다분히 在地사회세력의 성격과 권력집

단으로의 변화과정에 대한 것이 중심이 되고 있다. 여말 新興士族(혹은 新進士大夫)과 16세기 士林이 함께 中小地主이지만 여말 이래의 신흥사족이 16세기에 사림으로 일컫게 되는 까닭을 중소지주층의 확대, 지주제의 발달, 정치세력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 2) 黨爭과 朋黨政治

일제하 일본인 학자의 당쟁에 대한 연구는 시종 분열, 대립으로 파악되고 그것은 한국사의 타율성과 黨爭亡國論으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安廓은 《朝鮮文明史》(1923)에서 당쟁을 조선시대의 自治制 발달에 초점을 맞추어, 영국의 정당 발달과 비교하는 입장에서 서서, 勢道政治 이후 당파가 진보하지 못하였다고 파악하였다. 그는 당쟁을 긍정적으로 보고 세도정치를 부정적으로 보는 黨爭亡國論이 아닌 勢道政治亡國論을 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해방 후 60년대까지는 당쟁에 대한 연구도 없고, 당쟁에 대한 인식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70년대부터 당쟁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李泰鎭은 安廓의 선도적 연구에 힘입어 朋黨政治論을 제기하였다. 그는 재지중소지주적 기반을 가진 士林勢力이 中央政界를 주도하면서, 강한 學緣性을 가진 봉당정치 세력이 출현하였고, 그들은 상호 共存體制의 봉당정치를 정립시켰으나,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경제변동에 의한 이해관계에서 공존의식이 붕괴되고, 봉당이 외척세력의 주도로 퇴색하여 당쟁이 치열하게 되었다고 보았다(〈사림과 서원〉'78), 〈조선시대의 정치적 갈등과 그 해결〉'85). 李佑成은 조선후기 정치사 이해에 있어 권력집단으로서의 山林이 당시 정치를 주도한 세력임을 제기하여 山林의 성격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한국유교의 명분주의 및 정치적기능에 관한 일고찰〉'76).

숙종 이후 정조 때까지 격렬한 黨爭期와 蕩平期로 나눌 수 있다. 격렬한 당쟁기는 종래 儒敎亡國論·黨爭亡國論으로 주장되어 왔다. 姜周鎭은 당쟁이 숙종 이후 90년간이며, 정치적 갈등에 의해 불가피한 것으로 보아, 당시 사회체제, 제도 등의 기본 구조 속에서 설명하였다(〈이조당쟁사연구〉'71). 李泰鎭은 당쟁이 군사권 장악과 관련된다 주장하였고(〈삼군문도성수비체제의 확립과 그 변천〉'77), 李銀順은 老少 대립의 원인을 관념적 이념논쟁이 아니라 현실적 실리론과 의리적 명분론의 대립으로 설명하였다(〈조선후기 노소당쟁사연구〉'85)

탕평기의 연구도 80년대에야 본격적인 연구가 나왔다. 鄭萬祚는 노론·소론의 격심한 대립을 緩論탕평론을 주장하는 집단을 주축으로 이끌어 가는 과정으로 분석하였다(〈영조대 초반의 탕평책과 탕평파의 활동〉'83, 〈영조대 중반의 정국과 탕평책의 재정립〉'86), 朴光用은 영조 때는 緩論집단이, 정조 때는 峻論집단이 각각 탕평정국을 주도하였고, 이 시기에는 별열세력을 견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탕평론과 정국의 변화〉'84).

일제하의 당쟁사 연구는 파당성, 민족성론, 당쟁망국론으로 연결되어 한국인의 자치능력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었다.

이 방면에 대한 연구는 70년대부터 시작되었거니와, 봉당을 긍정적으로 보고, 一黨專制 내지 세도정치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리하여 선조대부터 광해군대까지 봉당정치의 과

도기로, 인조대부터 현종대까지는 봉당정치의 난숙기로 보고 있다. 그러나 숙종 이후 일당 전제의 추세가 나타나고, 영조때 노론 중심의 일당전제 속에서 閥閥政治가 나타나게 되고, 순조 이후 왕권의 약화와 함께 세도정치라는 파행적 정치형태를 낳게 되었다고 설명되고 있다. 앞으로 조선후기 정치세력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가 상세하게 분석된 연후에 체계적 정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社會史分野의 研究

### 1) 鄉村社會

일본인학자는 19세기말 한국 농촌을 원시공산사회의 촌락제와 씨족적인 사회통제조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福田徳三, 森谷克己). 이에 반하여 安廓은 村自治制를 주장하여 민중이 성장하여 이룩한 정치 운영방식이라고 평가하였다(《조선문명사》'23).

60년대는 사회학분야나 경제학자에 의하여 농촌사회에 대한 연구가 있었을 뿐이며, 70년대부터 역사학에서 향촌사회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조선전기의 향촌사회에 대한 연구는 李泰鎭, 李樹健의 연구에서 비롯된다. 李泰鎭은 성리학을 철학으로만 이해하던 통념에서 벗어나 성리학이 지니는 사회적 기능, 사회질서에 작용하는 측면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休閒法의 극복과 連作法의 보급이라는 경제적 변화가 수반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農法 개량 세력이 新興士族이며, 士林은 그 후예로서 향촌질서를 성리학적인 것으로 재편성하여 지배체제를 확립시켜 나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전기 향촌질서 확립과정은 중앙집권적 입장 대 재지적 입장, 훈구 대 사림의 대립으로 보고, 마침내 사림의 승리로 이해하였다(《한국사회사연구》'86). 李樹健도 조선전기 향촌사회 지배세력의 형성과 변천과정을 다루었다. 그는 여말의 향촌 지배세력인 土姓吏族이 조선초기에 士族과 吏族으로 분화되었으며, 사족의 성리학적 향촌질서로 재편성되어 나가는 과도기로 파악하였다(《한국중세사연구》'84). 전자는 15·16세기에 사족 중심의 지배체제가 확립되었다고 파악한 데 대해, 후자는 조선전기를 과도기로 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金俊亨은, 조선초기에 自然村 단위로 한 共同體가 성립되었다는 李泰鎭의 견해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여, 自然村으로의 성장은 조선후기에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里定法과 연결시키었다. 즉, 양역부담체제의 일부 기능을 촌락에 부과한 里定法을 촌락의 발전에서 파악한 것이다(〈18세기 이정법의 전개〉'84). 이에 朴鎭愚는 조선초기에 五方位面制가 성립되어 후기에 面里制가 발전, 정비된 것으로 파악하였다(〈조선후기 면리제와 촌락지배의 강화〉'88).

사족의 향촌지배도, 임란후에 약화되면서, 사족의 지배방식에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와(김용덕, 김인걸, 김준형) 이에 반하여 임란을 계기로 사족지배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이해준, 정진영)로 구분되고 있다.

金仁杰은 조선후기 鄉權의 추이와 지배층의 동향을 추구하였다. 그에 의하면 16·17세기는 士族이 鄉所를 장악하고 士族의 自治이었으나 18세기에는 소농민경제가 발전하면서 사족 이외에 新鄉이 등

장하여 18세기 후반에는 新鄕이 鄕權을 장악하게 되었으며, 19세기에는 在地土族의 지배력이 상실되고, 국가는 소농민에 대한 직접 지배를 시도하게 되어 洞契를 남세단위로 재편성하고 里定法, 比摠法 등 共同納을 강화하면서 농민의 항쟁이 民亂으로 이어진다 하였다(〈조선 후기 향권의 추이와 지배층 동향〉'81). 安秉旭은 조선 후기 民의 성장에 유의하였다. 그는 18세기 중엽까지 鄕會는 양반중심이었으나 19세기를 전후하여 향회에 평민이 참여하게 되고, 이 당시 새로 성장하던 饒戶가 권력층의 수탈대상이 되자, 그들 자신의 이익 방어를 위해 향회를 조직하여 평시에는 自治를 모색하였으나 民亂期에는 항쟁운동의 場으로 향회를 활용한 것으로 밝혔다(〈19세기 임술민란에 있어서의 향회와 요호〉'86).

향촌사회와 관련되는 것으로 鄕所, 鄕約, 洞契, 書院, 祠宇 등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金龍德《韓國制度史研究》'83, 李泰鎮〈士林派의 鄕約普及運動〉'83, 韓相權〈16·17세기 鄕約의 기원과 성격〉'84, 李成茂〈朝鮮初期의 鄕校〉'70, 李範稷〈朝鮮初期 儒學教育과 鄕校의 機能〉'76, 鄭萬祚〈17·18세기 書院·祠宇에 대한 試論〉'75). 70년대부터 시작된 향촌사회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성과를 보이었으나 앞으로는 향촌사회와 수취관계, 향촌사회의 지배실태 등을 상세히 추구하여 체계화하여야 할 것이다.

## 2) 身分制

조선시대 신분제 연구에 있어서 전기에는 양반론과 양천제의 논쟁이 두드러지고, 후기에는 신분제의 변동에 관해 관심이 집중되었다. 앞서 조선 전기의 양반론과 양천제 논쟁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므로 중복을 피하고, 다만 후기 신분제의 변동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 후기 신분제 연구의 선구적인 것으로 四方博의 연구는, 그가 조선사회 발전을 부정하는 근거로 파악하려는 것이었으나(〈이조 인구에 관한 신분계급적 관찰〉'78), 뒤에 그의 의도와는 달리 조선 후기 사회발전의 한 지표로서 해석되기도 하여 그의 연구는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것이다.

조선 후기 신분제에 대한 연구는 60년대에 金容燮에 의해 새로운 경향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주제와 신분제에 바탕을 둔 봉건적 사회구성이 조선 후기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농민층 분해로 신분제가 붕괴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조선 후기에 있어서의 신분제의 동요와 농지소유〉'63). 鄭奭鍾도 18·19세기에 사회경제적 변화와 관련시켜 신분제가 붕괴되었다고 주장하였다(〈조선 후기 사회신분제의 붕괴〉'72).

임란을 계기로 신분제가 동요된다는 것이 통설이 되어 오고, 신분제 동요의 배경을 사회경제적 변화에 구하는 연구가 나온 것과는 달리 와그너(Wagner), 崔永浩 등은 17세기에 신분제가 더욱 보수화 되었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1972, Social Stratification in 17th Century, 〈幼學·學生·校生考〉'84).

四方博의 호적 분석 이래의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韓榮國은 新戶문제를 검토하여 19세기 양반급증현상이 잘못 해석되었다고 지적하고, 호적상 기재된 호는 가족이 아니라 가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8·19세기 대구지역의 사회변화에 관한 일시론〉'76). 崔承熙는 四方의 호적분석에서 幼學이 시대의 변화와 관계없이 양반의 직역으로 파악한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조

선후기 신분변동의 사례연구' 85), 金泳護도 校院生 처리의 잘못을 지적하였다(〈조선후기 신분구조와 그 변동〉 81). 李俊九도 業儒·業武의 지위에서 잘못을 지적하고(〈조선후기 업유·업무와 그 지위〉 85), 李海潛도 儒戶 내에 상·하구분이 있었음을 밝혀 기존연구의 한계성을 지적하였다(〈조선후기 진주지방 유희의 실태〉 85).

한편, 각 신분층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중인과 노비에 대한 연구에 중점이 두어졌다. 金弼東은 후기 지방 이서층에 부과되던 향역이 실제로 감소되는 반면 경제적 보장은 커감에 따라 이서의 수가 증가되었다고 파악하였다(〈조선후기 지방이서집단의 조직구조〉 82). 全宇哲도 단성호적의 吏胥戶主를 분석하여 이서가 점차적으로 지배층으로 신분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李勛相도 18세기 이후 이족 내에서 진행된 가계분화를 다루어 이족 중 특정 가계만이 주도집단으로 성장하여 새로운 사회세력이 되며, 후일 근대화과정에서의 그들의 사회적 진출과 결부시키는 문제의식이 반영되고 있다(〈조선후기 경주의 향리와 안일방〉 85).

후기 노비연구에 있어서 平木實은 노비제의 변동과정과 免賤과정을 다루었다. 임란 이후 노비는 국역을 부담하는 등 신분이 상승되거나 입역·신공 등 과중한 부담으로 도망을 유발하게 되자 국가는 노비제도를 완화하거나 內寺노비를 폐지하였다 하여 노비의 신분상승으로 파악하였다(〈조선후기 노비제연구〉 82). 全炯澤의 노비 연구는 후기에 公노비는 법제적으로 일정한 제약을 받았지만 경제적 예측상태에서 벗어나고 있었으며, 私노비도 대부분 독립적인 변화를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와 노비정책의 변화로 연결시키었다(〈조선후기 노비신분연구〉 86) 앞으로 조선후기 신분제의 변동은 사회변동 속에서 각 계층의 실상을 밝혀 총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 3. 經濟史分野의 研究

#### 1) 土地所有關係와 農業經營

근대 이전에 있어서 지배적인 생산은 농업이기 때문에 근대 이전의 경제사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그러므로 전근대사회의 토지소유관계는 생산제관계를 지배하고, 또 그 사회의 제구조를 규제하는 강력한 기능을 장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토지소유관계 연구는 바로 토지가 맡은 역사적 기능에 대한 해명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제도 연구에서 60년대부터 토지국유제론이 배격되고 토지사유제론이 대두되었다. 종래 토지국유제론은 일본인학자와 유물사관학자에 의해서 주장되어 왔다. 일본인학자의 토지국유제론이 제기된 것은 토지조사사업 직후 和田一郎이 《조선 토지제도 및 지세제도 조사보고서》(20)에서 公田論에 입각한 토지국유제를 내세워 토지조사사업에서의 토지 약탈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었다. 그의 토지 국유제론은 深谷敏鐵에 의해 다시 윤색되어 로마법적 해석을 도입한 소위 토지지배의 3양식론으로 발전하였다(〈鮮初의 土地制度一斑〉). 그는 토지지배에 있어서 국가의 처분·관리권, 田主의 收租權, 佃客의 경작권 등이 각각 토지소유로 판명되나, 국가의 처분·관리권이 보다 우위의 소유권으로



연결된다는 토지국유제론이었다.

한편, 토지국유제론은 유물사관학자들에 의해서도 주장되었다. 그들은 토지의 공유 혹은 봉건적 국유라는 토지국유의 원칙 아래 국가의 토지소유에 대한 강대한 지배권을 「국가는 곧 최고지주」라는 맑스의 동양사회이론을 도입하였다(백남운 《조선봉건사회경제사》 상 '37, 박극채 〈조선봉건 사회의 경제적 본질〉 '46).

토지사유제론은 公田·私田·民田의 개념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에 대한 반성과 토지지배관계의 실태에 대한 구명을 통하여 토지국유제론을 배격하였다. 토지사유제를 주장한 선도적 학자는 姜晉哲, 李佑成, 千寬宇, 朴秉濠, 旗田巍, 有井智德 등으로 대표된다. 종래 토지국유제론에서의 公田·私田의 개념은 收租관계를 기준으로 한 개념 이외에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 개념이 각각 내포되어 있으며, 民田도 收租관계를 기준으로 하면 國家收租地·田主收租地이며,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면 民有地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고 밝히었다. 한편, 토지지배관계의 실태의 구명을 위한 民田의 연구에서 民田은 양반·중인·상민·천인 등 모든 계층의 民有地로서 상속·매매·전당 등의 처분이 가능한 토지임을 밝혀 냈다. 그리고 그 토지소유는 근대적 토지소유와는 다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民田을 봉건적 토지국유제론으로 계승한 견해도 있고(김옥근 〈이조토지제도사 연구〉 '73), 국가적 토지소유론을 제기한 견해도 있다. 李榮薰은 조선사회의 기본적 소유구조는 국가-지주-소작의 중층적 구조라고 하여 국가적 토지소유론을 주장하였다. 그는 중층적 소유관계를 궁방전·둔전의 제2種有土에서 찾았다(〈조선후기 토지소유의 기본구조와 농민경영〉 '85). 이영훈이 궁방전의 제2種有土는 국가적 토지소유의 전형적 형태라고 보는데 대한 朴準成, 都珍淳의 궁방전 연구는 그 반론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의 결론은 궁방전의 제2種有土는 궁방전의 한 유형에 불과하고 中畝主는 소유권자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사학계에서 토지사유제론에 공감하고 있는데 대하여 경제사가들에 의해서 토지국유제론이 주장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조선시대 농업경영에 있어서 地主佃戶制가 발달하였다는 것은 하나의 통설이 되어 왔으나, 종래 그 실체는 불분명한 것이었다.

15세기 농장은 여말의 농장과 다른 것으로 해명되었다. 周藤吉之의 여말선초의 농장에 대한 연구가 오랫동안 그대로 수용되어 왔으나(〈여말·선초에 있어서의 농장에 대하여〉 '34), 姜晉哲에 의해 여말의 권력형 농장에 비하여 15세기의 농장은 여말처럼 약탈적 지주가 아니며, 국가에 公租·公課를 부담하는 법 질서 속의 토지지배형태로 발전한 것으로 구별하였다(〈고려의 농장에 대한 일 연구〉 '80). 金泰永은 여말의 농장이 수조권·소유권을 집적하는 권력형 농장이었으므로 科田法에서는 소유권 위주의 토지지배관계를 공인하게 되고 私田은畿內에 제한하였거니와 職田稅의 官收官給制로 관료의 수조권 지배가 끝났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15세기에는 自營農의 비중이 컸으나 15세기 말부터 과중한 수취로 佃戶化되고 官人地主의 등장을 초래하였다고 파악하였다(〈조선전기 토지제도사연구〉 '83).

李景植은 16세기에 지주제도는 양반·토호가 토지매득과 新田개간으로 토지를 집적하여 대토지소

유자로 성장하였다 하고, 16세기 지주제도는 佃戶가 私賤으로 분장된 外皮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고, 경제적 관계에 의한 지주제 전개의 전단계라고 하였다(〈16세기 지주층의 동향〉'76). 그는 이어 17세기 지주제는 陳田·閑田 개간으로 양반 외에 상민·富民까지 지주층으로 성장하였음을 밝히었다(〈17세기의 토지개간과 지주제의 전개〉'73).

17세기 이후 지주제의 확대와 농민층의 분화 속에서 소농민 경영이 해체되고 서민지주, 경영형부농이 등장하였고 광작운동이 전개되었다는 것이다(김용섭, 송찬식). 李世永도 17세기 이후 소농민 경영의 몰락은 지주제 자체를 붕괴시킨 것으로 파악하였다(〈18·19세기 양반·토호의 지주경영〉'85). 그러나 李榮薰의 국가적 토지소유론에 입각한 지주제의 시각에는 차이가 있다. 그는 19세기가 지주제의 전환기로서 농노제적 소농경영이 해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조선후기 토지소유의 기본구조와 농민경영〉'85).

## 2) 農業生産力

일제하 조선시대의 농업생산력 연구는 농업생산력이 낮아 자본축적이 불가능하여 조선사회는 정체할 수 밖에 없다는 정체성론으로 귀결되었다. 일제하 한국인의 연구도 농업생산력이 정체되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해방 후 50년대까지의 연구도 정체성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정체성론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60년대에 일제 식민주의사학의 타율성론과 정체성론이 배격되면서 농업사 분야도 새로운 시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李光麟이 조선시대 水利 문제를 다루고(〈이조수리사연구〉'61), 李春寧이 조선시대 농업기술을 체계화하여, 초기는 농사직설을 통한 농업기술, 중기에는 농가집성을 통한 농업기술, 후기는 새로운 作物 등으로 새로운 면을 밝히었다(〈이조농업기술사〉'64).

농업사 연구를 통해 정체성론을 배격하고 내재적 발전을 실증하는 연구는 金容燮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는 조선후기 水田에서의 直播法에서 移秧法の 보급·稻麥二毛作, 旱田에서의 壟種法에서 畝種法으로의 전환 등으로 노동력이 절감되고 생산력이 증대되었음을 밝히었다. 이어 그는 농업생산력의 발전으로 농민층이 분화되었거니와, 廣作, 상업적 농업, 임노동 고용 등의 경영방식으로 경영형富農이 성장하였고, 봉건사회를 해체시켰다는 내재적 발전을 주장하였다(〈조선후기농업사연구〉 I·II, '70, '71).

조선전기의 농업사연구는 후기보다 늦게 착수되었다. 李泰鎭은 여말 新興士族이 성리학의 수용 이외에도 江南農法을 도입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여말·선초에 休閑法이 극복되고 連作法이 보급되는데, 신흥사족이 재지중소지주로서 강남농업을 도입하여 水田농업으로 치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14·15세기의 농업기술의 발달과 신흥사족〉'79). 宮嶋博史는 당시 농업기술의 발전은 《농사직설》에 집약되어 있는 바, 水田농업에서는 乾耕法, 旱田농업에서는 二毛作 내지 二年三毛作으로 파악하였다(〈조선농업사상에 있어서의 15세기〉'80). 이태진은 이어 중소지주층인 士族에 의해 川防 수리시설의 발달이 가능하였다고 하고(〈16세기 천방 관개의 발달〉'81), 사림의 성장과 사회경제적 배

경을 추구하여 16세기를 긍정적으로 파악하는데까지 그의 주장을 넓혀갔다(〈16세기 한국사의 이해 방향〉'86, 〈16세기 동아시아의 역사적 상황과 문화〉'83).

한편, 閔成基는 김용섭이 주장하는 조선 후기 畵田 농업에서의 壟種法에서 견종법으로의 보급에 이의를 제기하여, 조선전기부터 粟은 견종법, 粟豆는 농종법으로 재배되는 것이 일반적인 파종법이라 주장하였고, 조선시대 畵田농업기술의 발전은 1年1作식에서 2年3作식 내지 2年4作식이라 주장하였다(《조선농업사연구》'88). 李鎬澈도 조선전기의 농서를 통하여 농법·시비법·농구 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여 당 시기의 농업생산력 수준을 추정하였고, 나아가 조선전기의 사회구성을 서양의 고전장원단 계로 비정한 바 있다(《조선전기 농업경제사》'86).

### 3) 農民의 負擔

농민의 부세부담은 田稅 貢賦 役 還穀 등이 그 대종을 이루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세제도는 일찌기 朴時亨이 貢法 성립과정과 田結制 등을 다루어 조선전기 전세제도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라 할 수 있고(〈이조 전세제도의 성립과정〉'41), 일본인학자의 개략적인 것이 있을 따름이었다. 해방 후에도 별로 연구성과가 없더니 80년대에 이르러 김태영, 이재룡의 貢法에 대한 연구는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견주어 전세제도의 개혁이 규명된 것이다(김태영 〈조선전기 공법의 성립과 그 전개〉'83, 이재룡 〈조선전기 전세제도연구〉'83). 貢法에 의하여 제정된 전세액인 1결당 20~4두는 16세기부터 4~6두로 고정되었는데 인조 12년에 永定法으로 법제화되었거니와, 金玉根에 의해 永定法을 踏驗定額稅制(인조 12년~영조 36년)와 比摠定額稅制로 나누어 살펴졌다(《조선왕조재정사》'84). 이영훈의 八結作夫制에 대한 연구는 조선 후기 徵稅조직으로서 戶首代納, 共同納의 收稅단위로 밝혀졌다(〈후기 팔결작부제에 대한 연구〉'64). 김용섭은 순조 20년 田政의 폐단으로 量田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양전 반대세력 때문에 시행하지 못한 실정을 자세히 밝히었다(〈순조대의 양전계획과 전정이정 문제〉'83).

전세제도에 큰 변화는 중기 이래 三手米 大同米 結作이 차례로 전결에 부과되고, 그밖에 많은 부과세가 가중되었다는 점이다. 韓榮國에 의해 대동법 연구가 본격화되었거니와, 그는 上納米와 留置米의 용도, 행정구역단위의 공동부담에서 個人田結單位 부담, 재정안정을 위한 기획경제적 통제책 등을 밝히었다(〈호서에 실시된 대동법〉'61, 〈호남에 실시된 대동법〉'61). 田川孝三은 15세기에 공납과 신역이 布納되어, 포납화된 공납이 地稅化하여, 이것을 법률로 추인한 것이 大同法이라는 것이다(《이조 공납제의 연구》'64). 金潤坤은 대동법이 민중의 저항 투쟁에 의해 얻은 산물로 보며, 16세기 후반 이래 경제적 발전과 관련시키었다(〈대동법의 시행을 둘러싼 찬반양론과 그 배경〉'71). 김옥근은 함경도의 詳定法, 평안도의 收米法에 동질성을 찾아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고 주장한 점이 특이하다(〈대동법연구〉'74). 高錫珪는 공납제에서 대동법으로의 단계적 발전과정으로 私大同, 貢納作米, 半大同 등 대동법의 선행형태를 밝히었다(16·17세기 공납제 개혁의 방향)'85).

田川孝三의 《李朝貢納制의 研究》('64)는 貢物·進上, 貢納請負, 貢案과 橫看 등 여러 연구 성과가

담겨 있다. 공물은 주현 단위로 배정되어 다시 민호에 분정되고, 常貢과 別貢이 있으며, 분정된 공물은 民備공물과 官備공물로 구분되었으며, 貢物청납업자가 모리를 피하는 防納의 폐단이 살피졌다. 그리고 貢案은 고려 이래 세입 일람표인데 세조대에 세출일람표인 橫看이 제정되어 재정제도의 새로운 개혁이라 밝히었다.

역에는 일시적인 요역과 항구적인 國役이 있다. 조선전기의 국역에 대하여 金錫亨은 국역이 身役이며 신분에 따라 良役과 賤役으로 구분되며, 국역의 중심은 양인농민의 軍役이라 하고, 국역은 戶首와 奉足으로 편성되는 것임을 밝힌 바 있다(〈이조초기 국역편성의 기서〉 '41).

요역에 대하여는 해방 후 有井智德이 요역을 所耕之役과 雜役으로 구별하며, 조선초기에 計丁法 → 計丁計田折衷法 → 計田法으로 바꾸어 《경국대전》에 「八結出一夫」의 규정이 되었다고 해명하였다(〈이조초기의 요역〉 '61). 宮原兎一은 조선초기 奉足制에서 保法으로의 개혁을 국가권력에 의한 人頭的 지배를 목표로 삼은 것이라 주장하였다(〈이조군역제도 「보」의 성립〉 '63). 池斗煥은 고려 이래의 軍戶체제가 조선시대에 國家兵체제로 전환되어 국가병을 유지하기 위해 保法 내지 納布化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조선전기 군역의 납포체제 확립과정〉 '88).

후기 군역 연구는 車文燮의 선도적 연구에서 시작되었다(〈임란 이후의 양역과 군역법의 성립〉 '61). 鄭萬祚는 군역법 성립의 배경으로 良役變通論으로 游布論, 戶口·口錢論, 結布論 등을 검토하였으며, 군역법의 選武軍官은 유포론이 좌절되자 落講校生을 軍官으로 收布하는 내용으로 수용하였는데, 그들을 상승하는 양인농민층으로 보았다(〈조선후기 양역변통론에 대한 검토〉 '77, 〈군역법의 선무군관〉 '77). 鄭演植은 조선후기 양역의 모순은 良役價가 불균등하여(苦役은 3필, 지방 募屬은 1필 내외) 양역가를 균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17·18세기 양역 균일화정책의 추이〉 '85), 김진봉 등은 군역법 시행 이후 지방재정에서 중앙에 이속된 결손은 다시 농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다(〈조선시대 군역자원의 변동에 대한 연구〉 '83).

군역제의 동요, 戶布制의 시행에 대하여는 김용섭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共同納의 군역제는 軍布契와 軍役田의 수용으로 나타났으며, 고종대 호보법의 시행은 농민항쟁을 수습하려는 개혁초저였다고 평가하였다(〈조선후기 군역제의 동요와 군역전〉 '82, 〈조선후기 군역제 이정의 추이와 호포제〉 '82), 김준형의(〈18세기 里定法の 전개〉 '84)에서는 숙종대 이정법은 양역부과의 기능을 촌락에 맡겨 그 폐단을 줄여보고자 한 것으로, 里단위로 군역이 定額化되었으나 양민호의 도망으로 양반층도 군포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方基中의 17·18세기 田結稅·軍役稅의 金納化 과정을 다룬 연구는 군역을 부담하는 농민의 防納作錢에 항의하는 요구에 의한 것이며, 그것은 국가지배기구가 동요된 결과라고 보았다(〈조선후기 군역세에 있어서의 금납조세의 성립과 전개〉 '84).

환곡에 대한 연구는 宋贊植의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농민진휼책인 환곡에서 耗穀을 징수하게 되고, 16세기 중엽에 一分耗會錄으로 耗穀이 중앙재정에 계상되고, 17세기 중엽에는 三分耗會錄으로 모곡의 1/3을 중앙재정의 세입원으로 삼게 된 과정을 정리하였다(〈이조시대 환상취모보용고〉 '65). 朴

廣成은 영·정조대에 환곡 총액이 급증하고 세도정치기에 강제대부가 성행하여 농민경제를 파탄케 하였다고 한다(〈조선후기의 환곡제도에 대하여〉 '73). 김용섭의 〈환곡제의 이정과 사창법〉('82)은 환곡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 小변통과 大변통의 방안이 제기되어 오던 중, 대원군 집권기에 환곡제와 사창제를 절충한 戶布法은 수탈을 방지하고 耗穀을 징수하는 것이라 평가하였다.

#### 4) 商工業

조선전기의 상공업에서는 지방場市の 발생, 발달과 수공업에 있어서 官匠制수공업에서 私匠制수공업으로의 전환을 들 수 있다.

서울에 市塵이 있으나 지방에는 장시가 없고, 다만 상인(行商·陸商·水商·海商 등)이 확인되는데, 이들은 원거리를 왕래하는 일종의 隊商으로서 농촌의 定期場市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었다. 성종초(1470년경) 전라도 일원에서 장시가 발생하였고, 이어 장시는 경상·충청도에도 나타나서 16세기초에는 모든 도에 장시가 개설되었다. 宮原兪一은 이 시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것은 天災로 인한 기근이나 군역·부세 등의 무거운 부담으로 시달리던 농민들이 자구책으로 생계를 도모하기 위해 개설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다(〈15·16세기 조선에서의 지방시〉 '56). 그러나 이태진 등에 의하여 15·16세기 장시의 발생, 발달은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신장된 농업경제력을 토대로 대두하기 시작한 것으로 바로 잡았다.(이태진 〈16세기 동아시아 역사적 상황과 문화〉 '86). 宋在瞻은 16세기에 綿布가 화폐기능을 담당하여 正布·추布的 二元체제는 당시의 경제가 화폐경제의 여건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었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16세기 면포의 화폐기능〉 '85).

조선전기의 수공업은 공장, 직물, 도자기, 면업, 잠업, 제지, 군수공업 등에 관한 연구성과가 나와 있다. 특히, 강만길의 工匠연구에서는 15세기의 관장제수공업이 16세기부터 사장제수공업으로 전환되었음을 밝히었다(〈조선전기공장고〉 '61).

조선후기 상업사는 50년대까지도 상업자본의 집적 저해 요소를 규명하는 정도로 정체성의 본질 규명에 그칠 정도였다. 60년대에 농업사에서 자본주의 맹아론에 기초한 내재적 발전론에 발 맞추어 상업사를 다루게 되었다. 姜萬吉은 상업자본의 발달을 다루었고(〈조선후기 상업자본의 성장〉 '68), 劉元東은 18세기 후반 신흥상공인에 의한 구 상업의 붕괴과정과 수공업 발전을 다루었으며(《이조후기 상공업사연구》 '68), 金泳鎬는 市塵상인과 亂塵상인을 둘러싼 새 상업구조의 형성을 밝히었다(〈조선 후기에 있어서의 도시상업의 새로운 전개〉 '68), 이어 70년대에 강만길은 조선후기 상업구조 변화의 특질은 都賈상업이라 주장하였고(〈도고상업체제의 형성과 해체〉 '72), 유원동은 19세기 봉건상업의 붕괴과정을 다루었다. 80년대에는 京江旅客主人, 外方浦口主人 등을 다루어 유통과정의 실체를 밝히었다(李炳天 〈조선후기 상품유통과 여객주인〉 '83, 高東煥 〈18·19세기 외방포구의 상품유통 발달〉 '85, 李榮昊 〈19세기 포구수세의 유형과 포구유통의 성격〉 '85). 李世永은 곡물시장의 형성과 유통구조를 다루었고(〈18·19세기 곡물시장의 형성과 유통구조의 변동〉 '83), 吳美一의 貢人층의 계층분화를 다룬 연구도 나왔다(〈18·19세기 공물정책의 변화와 공인권·전계 창설운동과 난전활동〉 '87). 무역은 대

청무역에서 역관의 무역활동과 私무역인 後市무역에 관심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일무역 연구는 부진한 편이다.

후기 수공업 분야에서는 수공업이 대체로 상인자본에 예속되어 있었음이 밝혀졌다.(송찬식 《이조후기 수공업에 관한 연구》 '73, 김영호 <조선후기 수공업의 발전과 새로운 경영형태> '72). 화폐문제는 元裕漢이 17세기부터 개항기까지 화폐사를 체계화하였고 (《조선후기화폐사연구》 '75 등), 도시문제는 孫禎睦이 도시의 변화상을 구조적으로 밝혀보고자 했다(《이조시대후기 도시의 변화과정연구》 '76).

#### IV. 맺 는 말

이상으로 한국근세사 연구를 일제시기와 해방이후로 나누고, 해방이후의 연구는 정치사분야에서 양반과 사림 등 정치지배세력, 사회사분야에서 향촌사회와 신분제, 경제사분야에서 토지소유관계와 농업경영, 농업생산력, 농민의 부담, 상공업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제시기의 연구는 일본인학자와 한국인학자의 연구로 구분되며, 일본인 학자의 연구는 주로 당쟁사, 대외관계사, 토지제도, 조선후기의 정체성 등을 다루어 식민지주의사관의 타율성론과 정체성론으로 연결되었으며, 한국인학자의 연구는 각자의 취향에 따라 유교, 불교, 화폐, 과학사 등을 비롯한 여러 연구가 나왔는데, 특히 조선헌 운동으로 실학을 근대사상의 싹으로 파악하기에 이르렀던 것은 특기할 만하다.

해방이후의 연구는 6.25사변과 새로운 역사학도의 등장을 기다려 60년대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정치사분야에서 양반관료제에서의 양반, 사림의 실재에 대한 규명이 아직도 미흡하고, 후기 당쟁망국론에서 세도정치망국론을 주장하게 되었으나 아직도 후기 정치세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사회분야에서의 향촌사회문제는 조선전기는 농업생산력의 발전으로 자연촌이 성장하고 성리학적 사회로 확립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연촌으로의 성장을 후기로 보는 견해도 있어 아직 정론이 되지 못하고 있다. 사족의 향촌지배에 대하여서도 16·17세기는 사족의 자치, 18세기 후반에 신향의 향권장악, 19세기는 사족의 지배력 상실로 설명되고 있으나 아직은 시론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를 전후하여 향회를 중심으로 민이 성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데에도 더욱 실증적인 연구가 보태져야 할 것이다.

후기 신분제의 변동은 신분제 붕괴의 분수령이 되는 시기에도 견해가 일치되지 않으며, 호적대장의 분석을 통한 신분제 연구의 미흡성이 하나의 반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비를 제외하고 각 계층의 신분제 연구도 부진한 상태이다.

경제사분야에서 토지소유관계는 중요한 과제인데, 60년대에 토지국유제론을 배격하고 토지사유제론이 公田·私田·民田의 개념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와 민전의 실태에 대한 규명을 통하여 제기되었다. 국사학계가 토지사유제론에 공감하고 있는데 반하여 경제사가 중에는 봉건적 내지 국가적 토지소유라는 토지국유제론을 주장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농업경영에서는 전기의 농장은 여말의 농장과 구분되며, 조선후기 재리에 의한 지주제가 전개되는 것으로 보며, 이 때에 서민지주, 경영형부농의 등장으로 후기사회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농업생산력에 있어서 조선초기에 휴한법의 극복과 연작법의 보급, 강남농법의 도입, 水田농업에서의 乾耕法, 旱田농업에서의 2모작, 2년3모작 등이 밝혀지고 후기농업사에서 이앙법, 도맥이모작, 광작, 상업적 농업 등으로 내재적 발전론을 주장하게 되었다.

농민의 부담이 되는 부세제도에 대하여서도 전세, 대동법, 공물, 요역과 군역, 군역법, 환곡 등에 대하여 연구성과가 축적되었고, 부세에 대한 민의 저항으로까지 문제의식이 표출되고 있다.

상공업은 조선전기 장시의 발생, 발달과 수공업에서의 관장제에서 사장제로의 전환 등이 밝혀졌고 후기에는 상업자본, 도고상업 등으로 내재적 발전론에 발맞추게 되었다.

대체로 한국근세사 연구는 전기에 성리학과 농업생산력의 증대에 의한 양반사회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후기사회의 정체론을 배격하고 내재적 발전론이 자리잡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근세사 연구는 15세기, 18세기 연구가 많으며 상대적으로 16·17·19세기의 연구가 적다. 앞으로 각 분야별 연구의 균형도 주요하지만 각 세기별 연구도 균형을 이루어 한국근세사의 체계적 연구가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